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외교통일위원회 일본 방문 결과보고서

2022. 12. 3.(토) ~ 12. 5.(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보고서를  
『외교통일위원회 일본 주요  
외교현안관련 의회 인사 면담』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12.

국회의원 윤재옥 (인)



# 목 차

## I. 방문 개요

1. 방문목적 .....	3
2. 방 문 국 .....	3
3. 방문기간 .....	3
4. 방 문 단 .....	3
5. 방 문 단 프로 필 .....	3
6. 주요일정 .....	4
7. 소요예산 .....	4

## II. 주요 활동

1. 주일본대사관 업무보고 .....	9
2. 일한협력위원회 부회장 면담 .....	26



# I. 방문 개요







## 1. 방문목적



- 일본 정계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한 의회 친선교류 강화 및 한일관계 증진

## 2. 방 문 국



- 일 본

## 3. 방문기간



- 2022. 12. 3.(토) ~ 2022. 12. 5.(월), [2박 3일]


## 4. 방 문 단



- 단 장 : 윤 재 옥 위원장(국민의힘, 3선)
- 의원외교활동지원 : 이 승 찬 입법조사관(외교통일위원회)

## 5. 방 문 단 프로필(인적사항)



<b>위 원 장</b>		<p><b>윤 재 옥(1961년생, 대구 달서구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찰대 학사, 연세대 석사, 동국대 박사과정 수료</li><li>• 전)경북·경기지방경찰청장</li><li>• 전)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li><li>• 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li><li>• 3선(19,20,21대)</li></ul>
----------------------	---	---

## 5. 주요 일정



방문지	일 시		일 정
김 포	12.3.(토)	9:00	- 도쿄 향발(비행시간 2:05, KE2101)
도 교	12.3.(토)	11:05	- 도쿄 도착
		12:30	- 주일본대사관 업무보고
	12.4.(일)	18:00	- 일한협력위원회 부회장(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 면담
	12.5.(월)	8:50	- 김포 향발(비행시간 2:35, NH861)
김 포	12.5.(월)	11:25	- 김포 도착

## 6. 소요 예산



(단위:천원)

구분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계
금액 (천원)	항공임	2,147	407	-	5,318
	숙박비	1,061			
	일비,식비	1,652			
	국외준비금	51			
	소계	4,911			

\* 최종 정산에 따라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II. 주요 활동





## 1. 주일본대사관 업무보고



□ 일 시 : 2022. 12. 3.(토) 13:00

□ 장 소 : 주일본대사관 회의장

□ 주요 참석인사

우리 측	상대 측
윤재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승찬 입법조사관	윤덕민 대사

## □ 주요 현안 보고사항

### 1 정무분야

-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
  - 다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소송 판결 등으로 한일관계 경색국면 지속
  
-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상·고위급 및 각급 차원의 교류를 통한 양국 정부간 긴밀한 소통 지속 및 조기 신뢰관계 구축 추진 중
  -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 관련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한 대화·협의 지속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 `18.10.30.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상대 재상고심 원고(피해자) 승소 확정 판결 이후 일측은 강력히 반발, 외교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양국간 큰 입장차로 인해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
  
  -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논의 지속 및 각계인사 대상 아웃리치 활동 지속 전개
  
  - 양국 외교당국간 각급 차원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열린 자세로 해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일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
  
- 일본 근대산업시설 후속조치 이행
  - `15.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강제동원되었던 7개 시설 포함)가 세계유산으로 등재
    -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 마련을 권고



※ 또한, 당시 일본 대표는 동 권고와 관련한 후속조치(▲강제노역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 ▲희생자 추모 조치)를 약속

- ‘20.6월 도쿄 소재 산업유산 정보센터 개관(희생자 추모 조치 전무 등 세계유산위원회 권고 및 일측이 약속한 후속조치 불이행)
  - ‘21.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strongly regret)을 표명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 채택
  
- ‘22.12.1 일측은 근대산업시설 관련 이행경과보고서를 유네스코 측에 제출

#### □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 ‘21.12.28. 日 문화청은 2023년 세계유산 후보로 사도광산(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강제동원)을 선정, ‘22.1.28.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발표
  - ‘22.2.1. 日 정부는 각의 결정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 제출
  
- ‘22.7.28. 日 문부과학대신은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서류 미비 판정을 받아 2023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어려워졌다고 발표
  - 日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 한다는 방침에 따라 ‘22.9.29 추천서 잠정본을 유네스코에 제출(‘23.2.1까지 정식 추천서 제출 예정)
  
-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업 하에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
  - 특히, 일측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
  - \*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 설명,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는 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일본 내 동향을 주시하며 수시 파악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 중

□ 독도

- 영토 관련 자국 입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홍보하기 위해 내각관방 내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홍보 및 자료 수집 활동을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 중
- 독도 관련 日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따른 원칙적 대응

□ 야스쿠니 신사 참배

- 21.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기시다 총리는 종전기념일 및 춘계·추계 예대제 등 계기 공물(료) 봉납(직접 참배는 미 실시)
- 우리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 전달

□ 교과서 문제

- `22.3.29. 日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 독도 관련 부당한 영유권 주장 포함 및 과거사 문제 관련 표현·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
  - ※ (독도) 고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14, ’18)에 따라 사회과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등 기술
  - ※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위안부’, ‘강제연행’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日 정부의 각의결정(‘21.4월)을 근거로, 검정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 “위안부”로, “(강제)연행” 표현이 → “동원/징용”으로 변경

- 우리 정부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일측에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예정

※ ‘22.3.29 日 문부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시 우리 정부는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 엄중 항의 및 대변인 성명 발표 등 조치

#### □ 북한 문제

- 납치·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는 대북정책 기조 견지 下, 기시다 총리의‘조건 없는 일북 정상회담’제안에도 가시적인 대화 움직임은 없는 상황

#### □ 과거사 현안 대응 노력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 지속

- 외교장관·차관·국장급 등 각급 차원의 협의 등 다양한 계기 활용, 우리 정부 입장 설명 및 상황 관리 필요성과 방안 협의 지속

#### □ 정계, 언론계, 학계 등 일본 사회 내 각계각층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현안 관련 우리 입장 설명

- △주요 과거사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 △한일관계 발전 필요성 △일측 성의있는 호응 필요성

- 일본 주요 정당 대표, 전직 총리 포함 원로 정부 인사, 일본 주요 언론사 대표 등 면담 실시

#### □ 일북관계 관련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과정에서 일본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 및 소통 지속

- 한일 양국은 ▲양국 정상, 외교장관, 차관, 북핵수석대표 회담·통화, ▲한미일 3국간 각종 협의 등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협력 중

-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상·고위급 및 각급 차원의 교류를 통한 양국 정부간 긴밀한 소통 지속 및 조기 신뢰관계 구축
  - 정상/외교장관간 서한 교환 및 통화 등 소통 노력 지속
  
-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한 대화·협약의 지속
    -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논의 지속 및 각계인사 대상 아웃리치 활동 지속 전개
  - 이와 함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유네스코 근대산업시설 정보센터 전시내용,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역사인식 문제, 독도, 교과서 등 갈등요인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본입장에 따라 단호히 대응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일본의 협조 확보 노력 / 북일간 대화 등 움직임 지속 주시
  - 이를 위해 일본 외무성 등 관계부처 및 주요 인사와 소통 지속

## 2 공공외교 분야

- 적극적인 대일 공공외교 전개를 통한 한일 우호정서 확산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본 대중과의 쌍방향 소통 지향
  - (네트워크 강화) 정계, 언론계, 학계 등 일본 사회 내 전반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기반 강화
  - (미래세대 대상 공공외교 확대) 일본 주요대학 학생, 중·고등학생 등 대상 강연을 강화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정서 확대 및 올바른 한일관계 인식 계기 마련
    - ※ 히토츠바시大(2021.10.26), 와세다大(2021.11.16), 게이오大(2022.1.12, 4.20, 7.11), 아오야마가쿠인大(2022.5.7), 칸다

외大(2022.5.27), 도쿄大(2022.6.17), 고베大(2022.7.1) / 시  
오가마시中(2021.12.24), 칸다여高(2021.10.19, 2022.9.13.),  
쓰시마高(2022.6.30.), 아자부高(2022.10.13.) / 일한학생미래  
회의(2022.5.13.) 등

- (디지털 플랫폼 강화) 접근성이 뛰어난 공관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활용, 한국 및 한국문화, 대사관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지속 송출함으로써 친한 정서 강화 및 쌍방향 소통 노력
  - 특히 기존 한국문화 소개 중심의 콘텐츠에 더해 일본문화 향유 콘텐츠 게재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 제고
  
- 일본 내 對한국 이해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공공외교 전개
  - 일본의 反韓·혐한 정서 완화 및 對한국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활동 강화
    - ▲ 각종 계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對日 우호 메시지 발신, ▲ 일본 언론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전개, ▲ 대사관 방문 프로그램 등 주재국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외교 실시 등
  
  -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등 일본 사회 내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각계각층 대상 對日 공공외교 적극 전개를 통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기반 강화 도모
  
  -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활용하여 한일 협력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 발신하는 한편,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실시. 끝.

### 3 경제·통상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 경제관계는 과거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성장, 한일관계 발전의 토대 역할 수행
  - 양국 △교역규모는 최고 약 500배(1965년 2.2억불에서 11년 1,080억불까지), △인적교류는 약 1,000배(1965년 1만 명에서 2018년 1,000만 명 돌파) 이상 확대

- 다만, 최근 한일관계 여파 및 코로나19 등을 배경으로 양국 간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경제관계 주요지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이래 점차 회복중

#### ※ 경제관계 추이

- 교역액(억불) : ('14)860 → ('15)715 → ('16)718 → ('17)819 → ('18)851 → ('19)760 → ('20) 711 → ('21) 847
- 對韓투자액(억불) : ('14)24.9 → ('15)16.7 → ('16)12.5 → ('17)18.4 → ('18)13.0 → ('19)14.3 → ('20)7.3 → ('21)11.2
- 일본인 방한객(만명) : ('13)275 → ('14)228 → ('15)184 → ('16)230 → ('17)231 → ('18)295 → ('19)327 → ('20)43 → ('21)1.5

- (교역) 양국간 교역액은 글로벌 경기둔화, 코로나19, 한일관계 여파 등의 영향으로 2019-2020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21년 들어 회복세
  - 2021년 우리의 대일 수출 및 수입은 각각 300.6억불(+19.8%), 546.4억불(+18.7%)로, 코로나19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

- 대일 적자액은 최근 10년 간 200억불 규모에서 추이중이며, 2021년에는 245.7억불(△17.2%)을 기록

- (직접투자) 일본의 對韓 투자는 2022.6월말 기준 총 483.7억불(1962~누계)로, 2021년에는 통신업, 운송기계, 일반기계 등 분야에서 투자 확대 경향

- 일본은 단일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제2위 對韓 투자국(약 11.7%)

- (인적교류) 양국간 인적교류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연간 1만명 방문’에서 2018년‘연간 1,048만명 방문’으로 크게 확대
  -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제도 도입 및 사증면제 중단 등으로 인해 2021년에는 연간 3.4만 명 방문
  
- 인적교류 재활성화 등 코로나19 관련 현안 대응
  -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출입국 규제 강화, 한일간 항공노선 운항 중단·감축 등 관련 비자·검역·항공 분야 규제 완화 노력 경주
    - △한국인 대상 상용·취로·유학 비자(2022.3월)·단체관광비자(2022.6월) 발급 재개 △한국인 대상 일본 공항 도착시 PCR 검사 및 격리의무 면제(2022.6월)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2022.6월)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재개(2022.11월) 등
  
  - 코로나 감염 현황 및 일본의 백신 확보·개발·접종 관련 동향 파악 및 적시 보고 / 우리 국경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우리 기업인들의 왕래 △수출 통관 △우리 업체의 日 생산시설 언택트 현지실사 등 코로나 사태 下 우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소 노력 경주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일본 경제 영향, 경제체제 재편 동향, 향후 경제회복 전망 등 분석 및 보고
  
- 미래지향적 한일 실질협력의 토대 강화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축소된 우리 청년들의 일본 취업 현황 점검 및 취업 재확대 방안 모색
    -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설명회, 기취업자-구직자 네트워킹 간담회,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실시
    - 또한 외무성 각급 면담 계기 우리 취업 내정자 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완화 요구

- 일본의 주요경제단체(일한경제협회, 경단련, 상공회의소 등) 및 주요업계단체와의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 下 비즈니스 동향 파악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국 경제교류 재개 방안 수시 논의
  
- 우리나라의 능동적 경제안보 추진에 기여
  - 일측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제도 정비 및 보조금 등 정책 변화를 상시 점검하고, 우리 산업·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협력 모색 대응체제 마련
  - 가치 기반 新국제경제질서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참여 및 한일 공조 확대 도모
  
- 양국 경제현안 관리를 위한 활동 전개
  -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결정(2021.4월)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적극 대응
    - 일측에 우리측 우려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등 관련 일측의 실질적 협조를 건인하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한일 양자 소통·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일측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2019.7월~ ) 관련, 양자 및 다자 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동 규제의 부당성 강조 및 조속한 철회 촉구
    - 일본 정부, 재계, 언론, 학계 및 외교단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우리 입장 설명 및 아웃리치 활동 지속
  
  - 우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2013.9월~)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
    - \* 관련, 일본의 원전관리 적절성 및 식품 안정성 정보 파악 및 보고
    - \* 일측, WTO 상소기구의 우리측 승소 판정(2019.4월) 이후에도 수입규제 해제 요구 중



-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등에 관한 보고 업무 강화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대책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따른 일측 통상환경 정비 및 경제안보체제 정비 △탈탄소, 디지털화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및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등 일본의 경제정책 추진동향 심층 연구
  - 한일 양국이 공히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고용·인재양성, 재정 금융정책 운영 동향 보고
  - 일본경제 성장률, 무역수지, 엔화 및 주가동향, 소비자물가동향, 인구동향, 고용통계, 무역통계 등 경기지표 지속 점검 및 보고
- 양국간 주요 경제외교 현안의 안정적 관리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수출규제 등 현안별 양국간 정보 교환 및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당국간 협의 지원
  -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일본 정부 및 학계·언론계 등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계속
- 국제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적 입지 강화에 기여
  - 공급망 강화·중요자원 전략물자화 등에 대비한 경제안보 상시 대응 체제 마련
  - IPEF 등 新국제경제질서 수립 과정에서 한일 공조 및 CPTPP 가입 환경 모색
- 미래지향적 한일 실질협력 기반 강화
  - 양국 경제통상분야 학회간 교류 지원 등을 통한 경제분야 네트워크 강화 및 親韓 연구자 육성
  - 미중 경제마찰,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한일 양국 업계에의 영향 최소화 방안 모색 등 급부상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기제 적극 발굴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확보를 위한 활동 지속 강화
  -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 대상 유치 활동 적극 전개 및 부산 유치 홍보 리셉션 개최 등을 통한 일본 내 지지 분위기 조성

#### 4 영사·동포 분야

- 2021.12월 기준 재일한국인은 총 436,167명 (조선적 26,312명 포함)
  - 일본 법무성 통계
    - 국적별 인원 현황: 대한민국 409,855명, 조선적 26,312명
    - 재일한국인 중 체류자격별 인원 현황: 특별영주자\* 267,070명, 영주자\* 73,037명, 유학생 8,616명
      - \* 특별영주자 : 광복 전 도일하여 일본에 영주하는 사람 및 그 자손(일본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사람 및 그 자손)
      - \* 영주자 : 광복 이후 도일하여 일본에 영주하는 사람
  
- 최근 동포사회는 세대교체(1세대 인구비중 5% 이하), 신정주자 증가, 국제결혼 및 일본국적 취득 증가로 구조적 변화 진행 중
  
- 특별영주자, 영주자, 신정주자 및 일본귀화자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동포사회의 화합·단결을 유도하기 위해 △(민단/비민단)제반 동포단체 행사 적극 참가, △민단을 중심으로 한인회 등 여타 동포단체들이 상호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토록 지원
  - 1946년 창설된 전국조직인 민단을 비롯한 한인회 등 여타 동포단체들이 상호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추진토록 지원하는 한편, 민단 조직의 차세대 육성 사업 지원
  - 재일본YMCA 주최 「제103주년 2.8 독립선언 기념식」, 재일민단 주최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제77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제99주년 관동대지진 추념식」 등 참석 및 지원

## □ 민단 미래 방향

- 민단은 과거 영사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준)정부기관에 근접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 동포사회에 있어 조직력과 리더십을 발휘했으나, 최근 민단 조직의 고령화, 동포 권익 확보/위상 제고에 의한 차별 감소 등으로 인해 민단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구심력이 약화되는 추세

※ 1세대 비중이 3~5%에 불과, 성인 중 5세대까지 분포(청년층의 민단 참여 및 관심 저조)

- 향후 민단이 한일친선과 교육, 취업, 결혼, 문화지원 등 재외동포 생활 전반을 다루는 단체로 점진적 변화 유도

## □ 민단 정부지원금 지원

- 민단지원금(재외동포재단 예산 지원)은 1978년부터 연간 100억원 규모였으나, 2000년 이후 85억원 수준에서 지원해왔으며, 2013년부터 80억원 수준 유지, 2022년은 75억원 지원

- 관할공관을 통해 중앙본부(40%) 및 지방본부(60%)에 교부하되, 사업성격, 성과, 효용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지원 시행

- 본부-재외동포재단-당관 합동 매년 정기 지도점검 및 필요시 수시 점검 및 당관의 수시 점검, 지원금 신청서 및 집행결과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지원금 운영 관리

※ 재일민단 지도점검 시행(외교부, 재외동포재단) : 2013년부터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 매년 2회(통상 3월, 12월) 실시

- 아울러, 민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금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재일동포 권익 증진

- 재일동포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지위 확보 노력 및 지방참정권 부여 입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 2016.5.24. 일본 국회 통과(동년 6.3. 시행)
    - ※ 동 법률은 ‘타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지 규정과 벌칙은 불포함
    - ※ 민단은 법률 제정 자체는 일본내 최초의 인종차별 규제 법안이라는 차원에서 환영하고 있으나,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해 금지 규정 도입 등을 목적으로 지속 노력한다는 입장
  - 현재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시행 중인바, 관련 동향 지속 주시하면서 확대 추진
    - ※ 16.7.1. 오사카시 조례 실행 (전국 최초)  
(헤이트스피치 심사회를 설치하여 발언내용 등을 심사후 혐의 발견시, 발언개요, 성명/단체명을 오사카시 홈페이지에 공표)
    - ※ 18.4월 세타가야구 조례 실행  
(벌칙은 없으나, 성소수자와 인종차별에 특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상담을 받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 19.4월 동경도 조례 실행  
(벌칙은 없으나, 헤이트 관련 활동목적으로 공원 등 시설 이용 제한 규정)
    - ※ 19.6.25. 가와사키시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조례(가칭)’ 초안 공개  
(헤이트스피치를 3차례 반복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 최초 포함)
    - ※ 21.10월 사가미하라시 시민단체 「반차별 사가미하라 시민 네트워크」에서 헤이트스피치 조례 제정 요청서를 사가미하라시 및 시 산하 자문기구 ‘인권시책심의회’에 제출

□ 일본내 혐한시위 대응

- 2013년 이래 신오쿠보 등 도쿄 시내 한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반한 시위 및 혐오발언(hate speech)이 지속 발생하였으나,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한 긴급사태선언 장기화 등에 따라 도심 내 대규모 혐한시위 건수는 다소 감소
  - ※ 혐한 시위 현황(도쿄) : 5건(2018)→ 4건(2019) → 3건(2020) →3건(2021)→2건(2022)
- 2016.5월 일본 국회의 헤이트스피치법 제정 이외에도 최근 가와사키시 등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동향을 주시 중
  
- 일본 경찰당국에 우리 국민의 안전 및 피해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안전공지 등 재외국민 보호 노력 지속
  - 혐한시위 정보를 공관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공지 및 한인단체 등에 전파하고, 시위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 피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사건사고 대처 및 수감자 지원

-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면담 등을 통한 신속한 경위 파악 및 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
  
- 재외국민 체포 및 구금자에 대한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영사조력 제공
  
- 당관 관할지역 9개 형무소에 수감 중인 우리국민에 대해 정기(매년 2회) 및 수시 영사면회 실시
  
- 코로나19 감염 우리국민 신속 파악 및 필요한 영사조력 제공

## □ 대규모 자연재해 대비

- 2011.3.11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수도권 대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신속대응 체제 강화
  - 비상상황 발생시 국민보호반 가동 예정 (종합대응팀, 상황관리팀, 국민지원팀, 현장대응팀 등 4개 팀으로 구성)
  - 재일민단 한인회, 등 동포단체 비상연락망 지속 정비
  - 지진발생 대응 도상훈련 정기 실시
  - 긴급상황 대비 당관 비상연락체제 구축 및 재외국민등록자 중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중장기 체류자) 대상 안전문자 발송
  
- 주재국 관계당국과 협조체제 구축
  - 일본 경찰, 방재센터, 외무성, 법무성, 소방청, 출입국재류관리청 등과 유사시 긴급 협조체제 유지

## □ 코로나19 상황 관련 원활한 영사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조건·방역조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즉각적인 홈페이지 공지 및 전파 등을 통해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주요 동포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통해 우리 동포 대상 코로나19 상황 출입국 관련 정보 적극 전파
  
- 일본 출입국 관계당국과의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국민 입국 시 공정한 심사 요청 및 협력 관계 구축

## □ 여권 및 사증 발급

-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여권 발급량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2020~2021) 다소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극복 추세에 따라 금년에는 발급량 증가 추이

## □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해 온 ‘조선적’ 동포 국적변경자 대상 국적설명회 정기(격월 1회) 개최

- ※ 2022년 총 74명의 조선적 재일동포 대상 재외국민등록·한국국적확인증서 발급

□ 사증 발급 관련 온라인 예약 서비스 도입 등 절차적 간편성·신속성 등에 중점을 둔 영사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지속 추진

□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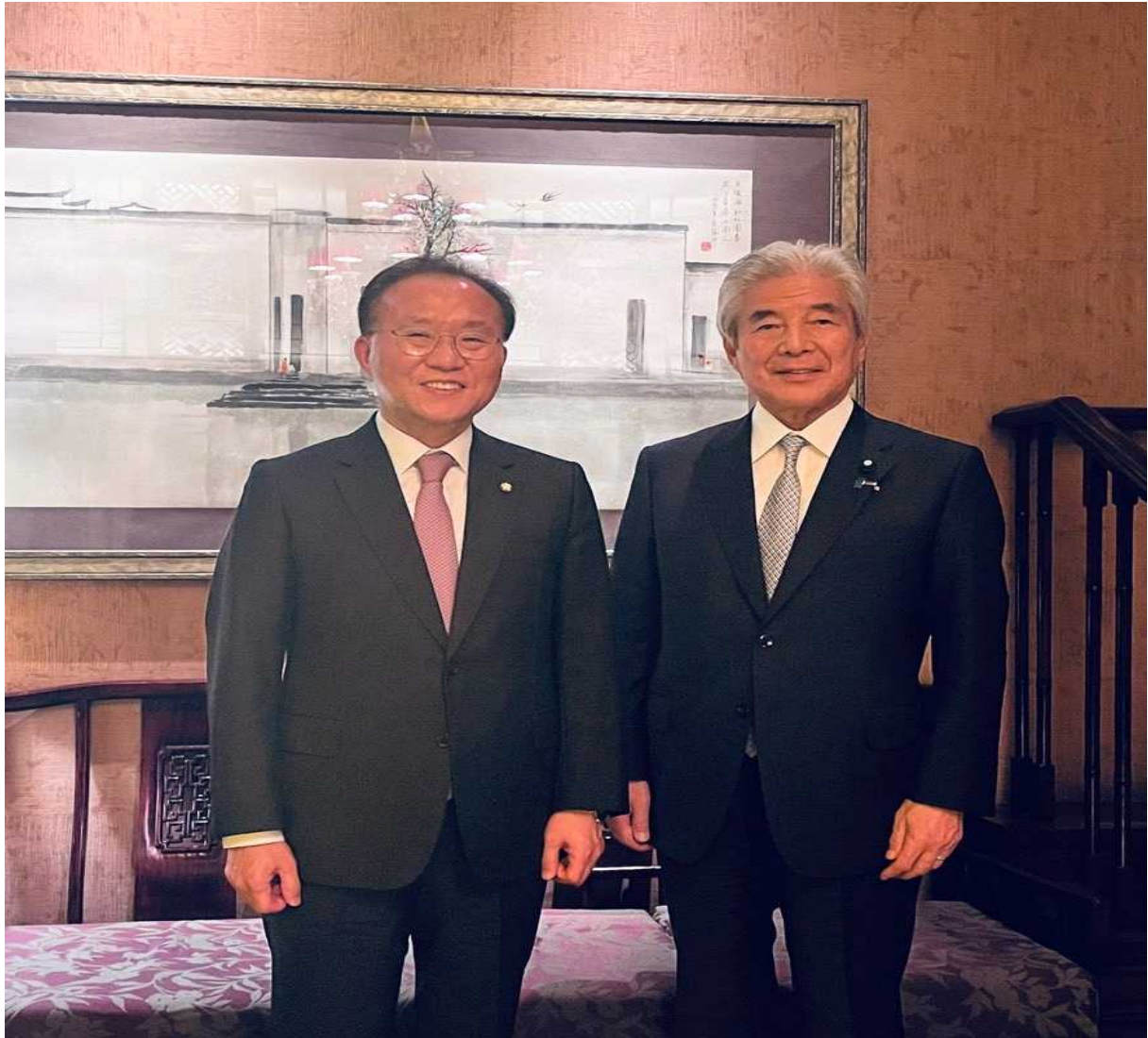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 : 영사설명회,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체류정보, 안전정보, 취업 알선 등 체계적·지속적 지원

※ 1999.4.1부터 한·일 양국 상호간에 시행해 오던 관광취업 비자 발급 대상인원을 7,200명(2009)에서 1만명(2011)으로 확대

○ 코로나19 이후 : 워킹홀리데이 사증발급을 잠정 중단하였다가 2022. 6월부터 재개

※ 2022.6.1.부터 11.30.까지 164명에 대해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

## 2. 일한협력위원회 부회장 면담



- 일 시 : 2022. 12. 4.(일) 18:00
- 장 소 : 도쿄 시내 중식당
-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한협력위원회 부회장



## □ 주요 면담사항

### 1 인사말씀

- (윤재옥 위원장) 유흥수 전 대사님께 제주포럼에 참가해주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어, 인사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되어 반가움.
  - (나카소네) 윤대통령 취임 축하 및 이태원 사고 애도 표현, 축구 16강 진출 축하 말씀
  
- (윤재옥 위원장)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바, 현재 우크라이나 등 세계정세를 바라보면 안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임.
  
- (나카소네) 일본 정부 또한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일반국민들에 있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어 가기를 기대함.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및 중국의 군사 확대, 러시아 정세 등 한일 양국에 있어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바, 안보를 생각했을때 한일관계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미일이 협력하여 곤란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임.
  
- (윤재옥위원장) 한일 셔틀외교도 빠르고 부활시키고자 함. 한일간 의원외교 뿐 아니라 여러가지 채널의 외교를 활성화시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 나가면서 교류를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겠음.

### 2 의원외교활동 소개

- 본인은 일본의 여러 지방도시를 방문한바 있음. 히로시마, 후쿠오카, 교베, 교토,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을 방문했고, 본인의 선거구인 대구와 히로시마시가 자매도시를 맺은것을 계기로 히로시마에도 방문하였음.
  
- 2050 부산 박람회 개최를 위해 각 국을 돌며 협력을 요청중임.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3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교환

- (나카소네의원) 한일 모두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가 안보가 우선임. 국민들도 이러한 가치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함. 안보면에 있어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윤재옥위원장)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다 보면, 일부 사람들이 한국은 어째서 미국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음. 그러나 그들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북한의 위협상황 등 실정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임
- (나카소네의원) 한국전쟁이 끝난 후, 휴전상황이고 종전된 것이 아님. 본인도 판문점에 2번 방문한바 있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한일은 이를 함께 방어해 나가지 않으면 안됨.

### 4 북한의 핵위협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 (윤재옥위원장)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과, 최근에는 핵을 보유한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과 일본의 영해 사이에 항상 대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는지?
- (나카소네 의원) 일본은 비핵화 3원칙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들이지도 않는다)을 지켜온 나라임. 때문에 중국 및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이 있을시에는 미국이 보유한 핵으로 억지력을 기대해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여론이 바뀌고 있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러대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되고,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지금, 일본은 이 미사일들을 제대로 다 요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고 있음. 이른바 ‘반격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내에서 논의되고 있음. 북한의 공격은 돌발적이고, 긴박하게 이루어지는바, 그 때 즉시 대응하는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큼.

- (윤재옥위원장) 나토에서는 지역내의 방위력 구축을 위한 공동훈련을 실시중임. 나토 총사령관 지휘 하에서의 공동 군사훈련 체계가 존재하는데, 이처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결속을 내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역내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미일 3개국에 의한) 공동 군사훈련의 전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나카소네 부인) 아들인 야스히로가 올 가을까지 방위정무관 자리에 있으면서 한 이야기인데, ‘반격능력’은 꼭 필요하다고 함. 나토 참가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면, 역내 억지력을 발휘하는 미국 및 나토 가맹국가들의 협력으로 전쟁을 버텨내고 있으며, 상황도 그리 나쁘지 않음. 이러한 결속력이 없다면, 공격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것 (이라고 함) 이는 중국 및 러시아 등의 위협에 처해있는 한일에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함.

## 5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

- (윤재옥위원장) 전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로서 이루어내고자 노력했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했으며, 유엔안보리 규제를 풀어주고자 노력하는 외교방침이었음.
- (윤재옥위원장)이에 반해 윤 정권은 군사적으로는 미군과 군사동맹훈련을 재개하는 등, 원래의 자세로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응사격을 실시하겠다는 자세임.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된다면, 미국과 의논하여 (지금까지는 일체 인정하지 않았던)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음.
- (윤재옥위원장 )따라서 문 정권은 겉으로 봤을때는 평화로워보일 수 있으나, 그 평화는 한쪽의 일방적 희생으로 쌓아올린 평화로, 진정한 평화가 아님. 윤 정권은 북한의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의 자위권 행사 영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임. 이는 겉으로 보았을때 긴장상태로 보일 수 있으나,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윤재옥위원장) 한국의 박진 외무장관은 (현재 북경에 입국할 수 없어) 얼마전 텐진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 장관과 회담한바, 중국 측이 (전 정권때처럼)사드의 3不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는 한국의 자위권 행사 영역이므로 간섭하지 말아 줄 것을 표명했음.
- (윤재옥위원장) 경제규모상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 국가이기는 하나, 무조건적으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음.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과 연계하여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경제보다 중요한 가치는 안보이기 때문임.

## 6 APPF 회의를 이용한 의원외교 활성화

- (윤재옥위원장) APPF회의에는 매년 참석하시고 계신지? APEC등 합동 회의는 많으나, 이는 정부 간의 회의임.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기탄없이 주고받는 기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나카소네 의원님께서 이번에도 꼭 참석하시어 회의의 무게감을 더해주시기를 기대함.
- \* APPF(아시아 태평양 의회외교 포럼) :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의 부친인 나카소네 전 총리가 주도하여 만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회 외교 포럼
- (나카소네의원) 본인이 문부대신에서 퇴임한 후,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음. 1) 한중일 어린이 교류 (3국 어린이들이 모여 10일간 함께 생활하며, 동화를 만들고 낭독회를 가지는 교류회) 2) 교원 교류회 (당시 한국 유명환 장관과 함께 초중고 교원 100명을 모집하여 10일간 각지의 학교를 견학함) 3)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학 지원(일본의 국립대 4년 유학지원으로, 국내 29개 대학에 한국의 이공계 학생들이 유학하여, 좋은 자리에 취업한 결과를 냄)
- 이러한 활동들도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 중단되었으나, 약 20년간 지속되어온바, 더욱 많은 민간 교류를 지원하고자 함.

## 7 기타 양국간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한 의견교환

- 출생률 저하 및 그로 인한 학교, 군대, 결혼 등의 양국 상황 공유
-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

## 8 마무리 말씀

- (윤재옥위원장) 금번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국에 오실때는 꼭 연락주시기 바람.
- (나카소네의원) 금번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주최 도쿄서울 포럼이 개최 됨. 현재 회장은 아소 타로 전 총리이며, 본인은 회장대행을 맡고있음. 또한 1.16-18. 일정으로 한일일한협력위원회 공동총회를 위해 서울을 방문할 예정임. 단장 자격으로 방문할 예정이니, 잘 부탁드립니다.